

지방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절감 대책

김 현 기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I. 들어가며

지금 이명박 정부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경제를 되살리고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공공부문의 효율화와 예산절감, 기업규제 완화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예산절감은 공공부문의 개혁과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매우 긴요한 정책이 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핵심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의 군살과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이므로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시책은 제도와 기능, 행태와 의식 등에서 대단히 전범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게까지 실행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시책들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계획과 추진체계를 세우고, 거의 모든 분야의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있어 국가적인 과제로 승화되고 있다.

지금의 예산절감은 이전의 시각과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예전에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주민과 언론 등에서 논의되고 관행화되어 온 예산절감 내용들을 보면 제한된 범위(예를 들면, 관서운영비, 여비 등 경상비용)에 대해 기계적,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조직과 인력의 규모는 적정 한지, 기술적·제도적으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중복된 사업들은 없는지 등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들은 아니었던 셈이다. 2008년 4월에 지방예산절감 대책을 시작하면서 일부 혼선과 논란이 빚어진 것도 이전의 관행을 넘어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부터 출발한데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번 예산절감은 단순히 외형과 규모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례답습적인 예산사용 관행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행태와 마인드를 새롭게 환기시키고 업무프로세스에 내재화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수적으로는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 공공재정에 있어서의 원가의식 향상 등 지방 행·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재원을 아끼는 것 이상으로 절감을 통해 얻은 재원을 효과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욱 생산적이고 경기부양효과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많은 부문이 마찬가지로 상황이지만, 특히 지방재정의 경우는 올 한 해가 시련과 도전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여파는 실질경기 둔화로 연결되어 전 세계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내수경기의 침체와 경제성장의 둔화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비상사태에 준하는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수단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먼저 감세정책이다. 소득세·법인세 등 감세를 통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매출과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향후에 민간경제가 되살아난다면 결과적으로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하고 있다. 둘째, 재정지출 확대정책이다. 공공부문의 재정집행은 소비지출을 늘리고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유발하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셋째, 재정지출의 조기집행이다. 정부에서는 상반기 중에 예산의 60%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2008년 12월말 안에 국고보조금 등 국비예산을 배정하는 작업을 마쳤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비상대책’을 수립하고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비의 60%를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자치단체들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조기에 구현함으로써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상황과 정부정책 기조는 지방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 대 지방세 구조가 8 대 2로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가뜩이나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거래세와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목으로 인해 세입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감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자연증가분 이외에는 사실상 줄어든 셈이다. 더욱이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과 관련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정예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세출 구조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후속조치 사항들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지금의 경제 위기상황은 국가경제, 지역경제가 따로 없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극복해내야 할 과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경제여건과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지방재정이 받게 될 영향과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본 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시책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II. 지방재정의 현실과 여건 변화

가. 지방재정의 현주소

지방재정의 수입은 자치사무를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만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구조는 수입과 실제 지출간에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표 1] 국세 대 지방세 비율

(단위 : %)

구 분	'03	'04	'05	'06	'07	'08
국 세	79.8	79.2	79.5	79.3	79.5	79.2
지방세	20.2	20.8	20.5	20.7	20.5	20.8

* 자료출처 :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표1]에 나타나 있듯이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9.2대 20.8로 세금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이를 실제 사용하는 총 재정사용액 기준으로 볼 때 중앙정부는 40.3%, 지방자치단체는 59.7%인 163조 5,148억원(사실상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을 포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쓸 곳은 많은데 수입구조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등 중앙정부에 매우 의존적인 재원구조를 지니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포함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총예산 순계규모 124조 9,666억원 중 38.3%인 47조 8,195억원을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 그 결과 지방재정은 국가의 세제개편 등 재정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표 2] 2008년도 중앙정부 대 지방재정 구성비율

(단위 : 억원)

2008 예산 편성 결과	예산규모 비교(합계 320조 669억원)						
	중앙정부 195조 1,003억원 (60.9%)		자치단체 124조 9,666억원(39.1%)				
			의존재원(38.3%)		자체재원(61.7%)		
	국 세	기 타	교부세	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1,655,623	295,380	241,296	236,899	435,497	301,004	34,970

* 자료출처 :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또한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간 경제적 격차에 의해 세원이 편재되어 있고, 재원조달 능력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노력이 세수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재정·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국회, 학계와 언론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세입 증대 등 자구노력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표 3] 2008년도 지방재정자립도 분포

(단위 : 단체수)

구 분	합 계	구성비(%)	시·도	시	군	자치구
합 계	246	100	16	75	86	69
10%미만	13	5	—	—	13	—
10—30%미만	136	55	5	30	66	35
30—50%미만	59	24	3	26	6	24
50—70%미만	28	11	5	18	1	4
70—90%미만	10	4	3	1	—	6
90%이상	—	—	—	—	—	—

* 자료출처 :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재정자립도 50% 미만 208개 단체(84.5%)

나. 경제상황과 재정정책 여건의 변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09년도 경제운용방안¹⁾에 따르면, 실물과 괴리된 자산버블의 연쇄붕괴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미·일·유럽연합 등 선진국들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신흥시장국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선진국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 차입축소) 등으로 인해 신용경색이 확산되고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경기침체국면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시점까지는 상당히 장기간(과거 평균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90년대 중반까지 7~8%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했으나, 1996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4%대 이하로 하락하고 1인당 소득이 G7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1~2만달러 기간중 투자증가율이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등 내수기반이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 위기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사정이 계속 악화되면서 일자리 감소로 인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원화환율이 일본 등 경쟁국보다 3~4배 이상 절상되면서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과도한 외화유입으로 환율이 지나치게 절상되거나 일시적 유출로 인해 불안이 가중되는 등 자본수지 급변에 따른 경제의 불안정성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는 2008년 12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는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당초예산안과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원칙적으로 내년도에 우리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세가 완연할 경우 재정은 안정 기조를 가져야 하나,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우려하듯 전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위축이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더딜 경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조심스럽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²⁾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변동에 따라 지방재정이 받게 될 영향을 간략하게 몇 개만 추려보기로 한다.

첫째, 소득세·법인세 등 인하에 따라 교부세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 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세법 등 17개 개정법률안과 농어촌특별세법폐지법률안 등 2개의 폐지법률안이 지난 12월 5일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되었다. 이 개편안은 소득세 등

1) 기획재정부, 세계적 위기를 선진인류국가 도약 기회로!(2009년 경제운용방향),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보고회의 자료

2)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2008. 10

전반적인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법인세율 등의 감세를 통해 소비와 투자여력을 확충하는 한편, 과도하게 운영되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 개편은 시급한 분야를 우선 처리하고, 상속세율 인하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변동은 2.27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덧붙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판결과 함께 관련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100%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하다. 2009 예산에 부동산교부세 감소 보전분으로 예비비 1조 8천 6백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당장 2008년도 12월말에 배분된 부동산교부세가 당초 세입보다 8천여억원(환급재원 소요액 5천여억원 포함)이 부족하게 교부되는 등 지방재원의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사회복지·교육 등 의무적 경비 재원으로서 요긴하게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향후 관련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가적 또는 대체적인 재원방안 마련이 중요한 현안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분권교부세가 2010년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문제다. 2004년도에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서비스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2009년도에 기한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어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분권교부세 사업을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재원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로 추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아울러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도 보통교부세를 교부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의 차이로 인해 복지격차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드는 재정소요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연평균 20%씩 증가하였으나,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약 10%씩 증가하는데 그쳐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약 30%씩 급증하였다. 지방이양 후,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국가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결정권은 미약하면서 더 많은 책임과 재정부담만 떠안는 격이 되었다. 국가는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책임이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되어 일부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함께 재정적 어려움만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감사원에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사회복지분야 감사결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한데도 시설운영비 부담으

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시설 설치를 기피하거나 시설을 완공해놓고도 개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노인시설운영 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지역간에 시설 운영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종사자들의 이직이 잦고 이로 인해 시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바 있다.

다.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과 재정지출 확대

지방예산절감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의 재투자에 있다.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관리하고 아울러 경제살리거나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에는 예산관리에 낭비와 비효율이 만연했다는 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다만 예산편성·집행·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켜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절감’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만 강조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재정지출 총액을 감축시키는 ‘긴축재정’의 의미가 아닌 것은 물론, 계약·회계과정을 까다롭게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걸림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앞서 살펴본 중앙정부의 조세정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지방재정 여건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이다.

대통령께서는 ‘각 부처는 예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아야 하며, 예산이 통과한 다음 날부터 예산이 집행될 정도로 급한 상황’임을 강조한 바 있다.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공동인식에서 출발하여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위기관리체계 개선을 언급하고 공공재정의 시장경제적 기능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중앙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2009년도 상반기에 집중배정하였다. 아울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신규·계속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128개 사업에 11조 6,756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는 등 조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경제를 되살리는 일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한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재정 집행에 있어서의 구조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90% 이상을 발주하고 사업비는 60% 이상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의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 경제난국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관행적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려는 것이다. 즉, 인건비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상반기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되, 지방공기업 예산과 기금사업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조기집행에 장애가 되는 제도는 즉시 개선

토록 하는 한편, 조기집행 상황을 실시간(Real time)으로 점검하고 월별 평가를 통해 우수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몇 가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한다. 회계연도 개시 후에 예산을 배정하던 것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미리 예산과 자금을 배정하여 설계·감리·타당성 용역 등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2008년 12월에 입찰·계약을 체결하여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즉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규사업의 경우, 2009년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수의계약 대상사업도 2009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물론 수의계약의 내용 공개와 수주 독점 방지 등 투명성 확보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둘째, 지방비가 매칭 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현재는 국고보조금이 교부되고 나서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발주가 가능했으나, 차수계약방식을 통해 국고보조금으로 우선 발주하고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상 5~6월경에나 추진하던 지방자치단체의 1회 추정시기도 3, 4월 이전에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이월예산에 대하여도 1월중에 모두 확정하여 2009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셋째,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의 단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각종 개발계획 추진 시 이행하여야 하는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수시배정 국고보조사업은 조기배정으로 선회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자금의 신속한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집행 방식을 개선하여 현금이 공공지출의 최종수요자인 중소기업체, 저소득층,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자금집행 방법을 개선하고, 시공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담보로 채무보증을 실시하여 건설업체 등의 자금난을 덜어주도록 지속 권장할 것이다.

다섯째, 그 외 국내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비를 우선 지출하여 인근 자영업자 등에게 파급효과가 나타나도록 경상적 사업은 1/4분기 중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경비도 조기에 집행하여 영세한 제조업, 음식업, 도·소매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공기업 분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 시책을 적용한다. 특히 8.7조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을 상하수도·도로정비 등 지방SOC 사업에 장기저리(연 3~4%, 10년 균등상환)로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정된 여건이지만 지방재정 지출 확대를 최대한 추진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규모를 2009년도 당초 계획인 3.2조에서 1조를 늘려

총 4.2조 규모로 확대하고, 지방공사채의 경우도 당초 6.6조에서 2.2조가 늘어난 8.8조를 발행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장기저리의 양질의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소위 ‘지역발전협력기금’과 지방채발행 조합을 결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Ⅲ. 2009년도 지방예산절감 추진계획

예산의 조기집행과 예산절감은 마차의 양 수레바퀴와도 같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도 큰 과제다. 예산을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한 지방예산절감 시책은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와 성과를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눈여겨 보아야할 점은 예산절감시책을 통해 일부 자치단체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선심성 예산집행³⁾과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관행 등 불합리한 요소들의 개선이 시급함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예산집행 행태·의식을 개선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 2008년도 지방예산절감 성과와 과제

1) 추진배경 및 경과

정부는 국회가 지난 2001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면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제시한 부대의견을 2001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하였다.⁴⁾ 정부에서는 관서운영비(201목), 여비(202목), 업무추진비(204목),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10% 예산절감을 추진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집행 노력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경상경비 절감을 추진해 왔다.

3) 행사추계경비를 예로 들 수 있는데 2007년도 결산기준 7,0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평균 17%씩 증가하고 있어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 기획예산처, “2001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01. 1월, 5p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에서 2001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면서 촉구한 대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자율적인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집행하되, 일반업무비(204-01)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소관에 편성된 2001년도 예산총액의 10%이상을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경상경비의 범위 - 관서운영비(201목), 여비(202목), 업무추진비(204목),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비

한편,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를 설정하면서 ‘섬기는 정부’의 추진 전략과제로 채택한 ‘예산 10% 절감’의 취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새 정부는 낭비를 없앴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중요 공약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 또, ‘예산절감은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실현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제로서 정부예산을 항구적이고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절약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절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 있다.⁵⁾ 과거 경상경비 위주의 예산절감에서 사업비 전반에 대하여 예산절감의 개념이나 당위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라 하겠다.

인수위는 또한 ‘2009년부터는 보다 항구적인 절감이 가능하도록 재정사업의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 및 재정시스템 재정비를 본격화할 것이다. 당장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건설공기를 연장한 다든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단순 축소하기보다는 공공부문 전반에 창의와 혁신을 촉진해 정부의 군살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수위 보고 등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의 개념을 ‘예산의 편성·집행·사후관리 등 재정운용의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세외수입 등 수입을 확충하는 활동’으로 정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물가 및 에너지 대책, 지역현안사업 등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재투자하게 된다. 예산절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항구적인 절감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공무원의 행태·의식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에 대한 개념과 실행의지를 생활습관화·내재화할 때 비로소 지방행정 현장에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을 것이다.

2) 원칙 및 중점 고려사항

지방예산 절감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시책 성패의 열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절감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4가지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였다.

첫째, 예산절감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적인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둘째, 예산절감은 기존의 통상적·점증적인 방식이 아니라, 구조적 틀과 시스템을 바꾸는 수

5)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공 그리고 나눔(백서 1), 2008년

준으로 예산을 재검토하고, 행태·제도적 변화와 함께 원가·비용의식을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와 상급 자치단체가 예산절감을 지시·통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간에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넷째, 단순히 절감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두어 사업을 연기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추진·평가 등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례발굴과 제도적 변화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둔다.

예산절감은 곧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소를 뽑아내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예산절감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관련 매뉴얼⁶⁾ 등을 통해 예산 낭비적 요인이 라고 지적되어온 10대 중점 착안사항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하도록 하였다.

- 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간, 시·도와 시·군·구간, 자치단체 내 부서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한 낭비
- ② 계약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입찰과정에서 계약방법·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원가에 포함시켜 높은 가격으로 계약함에 따른 낭비
- ③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이나 시설·물품이 있는데도 중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낭비
- ④ 지역적 특색이 없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축제 난립으로 인한 낭비
- ⑤ 동일·유사한 연구용역 혹은 실제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용역으로 인한 낭비
- ⑥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이용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청사·문화시설의 경쟁적 건립에 따른 낭비
- ⑦ 마을·주민회관, 체육관·운동시설 등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 ⑧ 민간이전경비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낭비
- ⑨ 관행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함에 따른 낭비
- ⑩ 운용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성 있는 특별회계·기금의 난립 또는 과다 조성,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미흡으로 발생하는 낭비

3) 주요 성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08.4월에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단체별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

6) 행정안전부, 주민의 세금을 아끼는 예산절감 길라잡이, 2008년 9월

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행초기에는 예산절감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자치단체 내부에서 10% 절감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하여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다. 법정·의무적 경비지출이 많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실적을 내기 어렵다는 호소를 해오기도 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부단체장회의는 물론 기획관리실장 등 예산당국자 회의, 각종 포럼과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지방예산절감의 취지와 원칙, 방법론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다행히 예산절감시책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을 어느 정도 넓힐 수 있었고, 자치단체들도 단체장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등 12개 시·도가 10~13%, 나머지 4개 시·도가 6~9%의 수준으로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총 12.3조원의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였다.〈표4〉

[표 4] 2008년도 시·도별 예산절감 계획

(단위 : 백만원, %)

시도별	'08 순계예산 (a)	절감계획 (b=c+d)	절감비율 (b/a)	'08 집행상 절감액(c)	비 중	'09 편성상 절감액(d)	비중
계	124,966,561	12,273,894	9.8	5,117,273	41.7	7,156,621	58.3
서울	21,079,459	2,213,126	10.5	1,406,936	63.6	806,190	36.4
부산	7,118,849	710,000	10.0	271,023	38.2	438,977	61.8
대구	4,434,372	501,582	11.3	266,107	53.1	235,475	46.9
인천	5,864,439	710,763	12.1	278,536	39.2	432,227	60.8
광주	2,593,158	259,316	10.0	63,876	24.6	195,440	75.4
대전	2,520,957	252,001	10.0	71,647	28.4	180,354	71.6
울산	2,336,381	233,578	10.0	98,639	42.2	134,939	57.8
경기	24,435,026	1,669,191	6.8	751,524	45.0	917,667	55.0
강원	6,091,375	639,370	10.5	262,021	41.0	377,349	59.0
충북	4,674,410	470,000	10.1	126,514	26.9	343,486	73.1
충남	7,137,201	708,852	9.9	236,749	33.4	472,103	66.6
전북	6,459,626	588,396	9.1	165,688	28.2	422,708	71.8
전남	8,599,616	872,432	10.1	298,200	34.2	574,232	65.8
경북	9,119,515	1,200,000	13.2	300,000	25.0	900,000	75.0
경남	10,133,099	1,005,232	9.9	419,812	41.8	585,420	58.2
제주	2,369,078	240,055	10.1	100,001	41.7	140,054	58.3

※ 절감규모는 시·도 본청과 시·군·구를 합한 금액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예산절감 및 재투자계획에 따르면, 2008년도 중에는 5.1조원의 예산을 집행 상으로 절감하여 이 중 76%인 3.9조원을 경제살리기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며, 나

머지 1.2조원은 2008년도 추경재원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재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경제살리기 분야에 2.6조원, 직업교육이나 실업대책 추진 등 일자리 창출 분야에 580억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3천억원, 기타 환경과 초·중등교육 분야 등에 9,800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를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분야로 7,93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969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501억원으로 이들 분야들이 전체 재투자액 3.9조원의 52%인 2.1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7.8%의 압도적인 재투자율이 나타난 것은 경제살리기와 고용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자치단체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표5>.

[표 5] 2008년도 분야별 예산절감 재투자 계획

분 야	예산총계(a)	재투자액(b)	재투자율(b/a)	비 고
계	161조 2,021억	3조 8,961억	2.4%	
일반공공행정	20조 1,984억	3,510억	1.7%	
공공질서 및 안전	2조 3,913억	588억	2.5%	
교육	7조 1,459억	505억	0.7%	
문화 및 관광	7조 1,419억	2,888억	4.0%	
환경보호	17조 2,138억	3,370억	2.0%	
사회복지	33조 9,488억	3,436억	1.0%	
보건	2조 5,112억	237억	0.9%	
농림해양수산	11조 6,950억	2,492억	2.1%	
산업·중소기업	3조 898억	5,501억	17.8%	
수송 및 교통	19조 3,034억	7,931억	4.1%	
국토 및 지역개발	16조 1,932억	6,969억	4.3%	
과학기술	7,150억	313억	4.4%	
예비비	2조 2,490억	705억	3.1%	
기타(행정운영경비)	17조 4,056억	516억	0.3%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민간 전문가,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지방공무원 등을 포함한 총 28명으로 「지방예산절감 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지역의 현장을 방문하여 효율적인 예산절감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전국적으로 전파·확산이 필요한 사례들을 발굴하였다. 또한 예산절감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한편, 예산절감 평가기준 방안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이나 지역실정 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관련 메뉴를 개설하고,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의 예산·회계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유형 별·사례별 예산절감기법을 수록한 ‘예산절감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전국에 확산시키는 등 예산 절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08년 12월에는 한 해 동안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예산절감 시책 중 우수사례들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각 지역별 자체심사과정을 거쳐 제출된 총 151건의 절감사례들에 대하여 계약·설계 방식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3개 전문분야 별로 서면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29건을 선정하고, 이 중에서도 예산절감 파급효과 등이 우수한 것으로 민간심사위원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례 10건에 대해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통령상 7 억원, 국무총리상 5억원 등 총8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사업비로 지원되었고 이 사업비는 수상 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중소기업 지원분 야 등의 사업비로 투자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우수사례 - 2008.12.10 발표》

[사례 1] 도 정보통신망 통합 구축 (전라북도)

정보통신망의 운영방식을 개선(개별 수의계약→통합 공개경쟁의 회선임대방식)하고, 도·시 군에서 분산 운영중인 것을 통합 구축·관리함으로써 1,097억원 예산절감

[사례 2] 하수관과 상수관 병행 시공 (경남 양산시)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BTL)과 병행하여 노후 상수관 정비공사를 시행함으로써 178억원 예산절감과 더불어 양질의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위생 및 복리증진에 기여

[사례 3]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개선 (부산광역시)

기초생활수급 계층에 생계보조비, 월동대책비, 자녀교통비 등 매년 80억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재검토하여 공동작업장 설치지원, 창업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22억원의 예산절감

[사례 4] 전국 최초 프린터 토너절감 시스템 구축 (경상남도)

프린터 토너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국산제품을 연구·분석, 전국 최초로 “프린터 토너절감 시스템”을 구축하여 토너 구입비용 1억원 절감

[사례 5] 국세환급금 압류로 지방세 체납 징수 (서울 영등포구)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국세환급금을 채권 압류하여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함으로써 '07년 약 3억원, '08년 0.4억원을 징수하여 세입증대

[사례 6] 관용차량 및 신용카드를 통한 예산절감 (대구 중구)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구청장 전용차량 폐지, 사업용 차량 정수 2대 삭감, 운전원 감축으로 연간 1억원 예산절감 및 신용카드 마일리지 인상으로 연간 1천만원 수입증대

[사례 7] 소각장 폐열이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울산광역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 기업체에 공급하여 연간 50억원의 생산에너지 비용절감과 연간 48억원의 경영수익 발생

[사례 8] 예산절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 강동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부서에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즉시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 중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예산절감률 제고('08년 37건 제출, 18건 시행완료, 9건 시행중, 13건 검토중)

[사례 9] 하천·산악지역 레저도로 설계 개선 (강원 화천군)

급경사 산악지역 레저도로 개설시 당초 고가교 설치 계획을 경사의 형태에 따라 공법을 변경하는 방식(앵커매입형 테크)으로 변경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150억원의 예산절감 <'08년 신규 추진>

[사례 10]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 (전북 전주시)

기존 월정액으로 부과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배출량만큼 차등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간 22억원 예산절감 및 20억원 수입증대 <’08년 신규 추진>

나. 2009년도 지방예산절감 추진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지출 확대와 조기집행, 그리고 예산절감은 이상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것이다. 지난 ’08년 12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말씀을 통해 ‘재정집행과정에서 효과가 배가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과정에 비효율·비생산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알뜰하게 잘 써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재정의 조기집행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절감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재정지출 확대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교부세, 국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신속하게 확·배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도 교부세 등을 신속히 확정·통보하고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예비비를 조기 지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난 조기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착안하여 2009년도 예산절감시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가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7조원 규모의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동산교부세 등 재원은 감소되는데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뼈를 깎는 각오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2009년 당초예산 편성시 절감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 거품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중에 60%이상 예산을 사용하자면, 사업진행 전망이나 사전의 제반 절차가 여의치 못한 사업들의 경우는 다시 한 번 걸러내야 한다. 행안부에서는 예년 같으면 5월부터 6월 사이에 하던 제1회 추경을 2009년 3, 4월내에 마쳐줄 것을 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고 예산효율화를 구현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조기결산을 통해 이월예산 규모를 1월중에 확정하고, 지방의회 등과 협의하여 기간내에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08년도에 추진한 예산절감의 노하우와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함은 물론이다.

1회 추경 시 유의해야 할 점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업과 경비에 대하여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숨어있는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해야 한다. 계속사업은 실효성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축소·폐지하거나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한다.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재검토하고 원가산정방식 등을 통해 절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8년도가 ‘예산절감시책의 도입기’라 한다면, 2009년도는 재정 조기집행과 세입 감소 등 여건들이 맞물려 예산절감의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더욱 확대되는 ‘예산절감시책의 확산기’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9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낭비성 우려가 있는 민간단체 지원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은 재검토·축소토록 할 예정이다. 경상사업비 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투자를 유도할 것이다. 즉 해외경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행사운영경비, 민간이전비, 보상금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 SOC,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관련 예산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08년에 추진한 예산절감시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일선 공무원들에게까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발된 예산절감 기법 등을 반영하여 관련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 사례들을 적극 확산하며, 지방예산절감지원단을 가동하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예산절감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는 가운데 원가·비용마인드가 지방공직사회에 널리 정착되도록 범공직자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예산절감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국정과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예산절감 성과와 추진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8년도 예산절감 실적에 대한 평가지표를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시스템(VPS)에 포함하여 평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예산절감이 지역별 특성과 재정여건에 따른 자율적 추진’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절감비율, 예산절감 노력도,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반영한 다차원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IV. 맺으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발생한 우리나라의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려는 노력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조기집행, 그리고 예산절감시책으로 집약될 수 있다.

2005년도 기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재정지출의 국제비교를 살펴보면,⁷⁾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지출은 28.9%로 나타나 OECD 회원국 평균 40.8%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선진국의 재정지출을 감안하면 투자확대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하여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기업의 시장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공공재정 조기집행을 경제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탄탄하지만,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4대강 재탄생사업, 광역경제권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SOC사업들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지출 확대와 조기집행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지방재정의 한정된 세입구조로 당장의 재정지출 규모 확대는 다소 어려운 점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지방채를 최대한 확대한다거나 기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경제 조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예산절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성 높은 분야에 재투자하여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기축년(己丑年) 새해 벽두부터 우리 경제에 희망적인 청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에서는 2009년도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대신에 인도(India), 중국(China), 한국(Korea)의 ‘이크(ICK)’가 부상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상승률 둔화세도 지속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모아 경제난 극복에 힘쓴다면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성공의 기회로 될 수 있다. 그 시금석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예산절감, 지방재정 조기집행, 재정지출 확대, 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내는가에 있다.

7) 국회예산정책처,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및 국정관련 지표」, 2008년